

답 변 서

□ 사건번호 : 인 행 심 2020 - 82호

□ 사 건 명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 당 사 자

○ 청 구 인 : 고승구

(송달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처분부서 : 감사실)

2020 . 3 .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귀하

1. 행정심판 청구개요

☐ 사건번호 : 인행심 2020 - 82호

☐ 사 건 명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 당 사 자

○ 청 구 인 : 고승구

(송달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처분부서 : 감사실)

☐ 사건경위

○ 2020. 2. 24 : 인천공무원 갑질사건(연수구 옥련2동) 감사결과 정보공개 청구

○ 2020. 3. 4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 2020. 3. 6 : 행정심판 청구

2. 행정심판 청구 요약

청 구 인 주 장	피 청 구 인 주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무원갑질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감사처분결과 공개 요청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이 사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공무원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로, 공개될 경우 감사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개인생활 및 사회생활,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 해당 공무원은 이미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는 상태로 감사결과에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면서 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제3자가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지 않음. ○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법령에 의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함.

답 변 서

□ 사 건 명 : 『정보공개 거부처분』

□ 당 사 자

○ 청 구 인 : 고승구

(송달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처분부서 : 감사실)

심판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1. 행정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0. 2. 24. 인천공무원 갑질사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3. 4. 해당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공무원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는 공개될 경우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2019년 12월 당시 연수구 시보공무원이 사회복지무요원과의 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결과 공개는 이익형량 시 공익적 성격과 목적을 띄고 있다고 판단된다.
- 징계처분결과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자들이 특정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특정될 수 있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업무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이 사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를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 위 정보공개청구는 공무원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로, 공개될 경우 감사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개인생활 및 사회생활,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개인에 관한 사항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¹⁾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감사처분 결과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급, 성명, 임용사항 등 신상정보는 물론 피청구인 감사실에서 면담한 내용, 경위서, 확인서 등 개인의 인격주체성²⁾을 특징짓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공무원은 이미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는 상태로 감사처분 결과에서 성명 등을 지우고 공개하더라도 누구인지 예측이 가능함에 따라 감사결과에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면서 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제3자가 알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이 더 크지 않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률 규정, 비교형량, 사안의 특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법령에 의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합니다.

1) 관련판례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2) 관련판례 :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입 증 목 록

1. 을 제1호증 ----- 정보공개 청구서 1부.
2. 을 제2호증 -----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1부.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 발췌 1 부.
2. 2019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발췌 1부. 끝.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위 심판수행자 조사담당 임규빈 (인)
주 무 관 이영실 (인)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귀하